

與, 국민의당에 연대 손짓

여야정 협의체 난항에 정의당과 '개혁입법연대' 구성

보수 통합·중도 연대 기류도 의식...국민의당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구조의 정기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위해 국민의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우선 국민의당·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는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 거부할 동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 움직임이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연대 흐름을 고려해서라도 국민의당과 '거리'를 좁힐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략도 담겨져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연대 범위 등을 두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원내 지도부는 실무진 회의를 갖고서 개헌발차식으로 개혁입법연대를 띄우는 방안 등 정기국회 입법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국민의당과 '2+2(대표·원내대표) 협의체'나 '3+3(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를 구성, 상시로 인사·입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개혁입법연대 제안이 공식화된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여야정협의체가 이미 제안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연대에 나선다면 보수 야당의 반발은 물론 보수 야당 연대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등 소통 구조만 복잡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기국회에서 두 당간의 '중도연대' 기류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민주당과의 개혁입법연대에 나설 경우, 정국 방황식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아직 제의가 공식적으로 오지 않은데다 민주당 주도의 연대에 나서기도 애매하다"며 "개혁 입법

사안에 따라 협력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데다 당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 입법 연대에 나선다면 보수 통합을 촉발시키면서 정계개편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여권이 총력을 펼쳐야 한다"며 "인위적인 연대보다는 국민의당과 더욱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

정발위 2차 혁신안... 단일성 집단지도체계 복귀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정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년전 사퇴'에서 사퇴 기한을 더 앞당긴 것으로,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단수신정 지역 역시 신정자를 단수 공천하기 전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공천을 통한 단수추천에 대해 정발위 측은 "다른 물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현제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정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1년전 사퇴'에서 사퇴 기한을 더 앞당긴 것으로,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현행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오늘부터 국감 혈투

국회의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올해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비롯해 16개 상임위(결의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개가 늘어난 규모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피감기관은 ▲교문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남대·전남대병원·순천대, 전남도교육청·광주시교육청 ▲법사위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광주고검·광주지검 ▲행안위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 등이다.

주요 이슈별로 여야 공방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북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분야 ▲방산비리, (군)매글공작 ▲탈원전 정책 ▲언론 정책 ▲최저임금 인상 ▲보건·복지 정책 등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MB국정원 피해자' 이상돈 검찰 출석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11일 오후 국정원의 '비밀세력 전방위 공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 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바른정당 전대 전 통합"

한국당 최고위...유승민 "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길"

보수 야당 통합 논의가 주춤거리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1일 보수대통합 작업 착수를 선언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이 전대를 하게 되면 (보수 분열이) 고착화된다"며 "바른정당 전대 이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정당 통합파들은 일제히 화답하고 나섰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 전대대회 전 보수대통합 작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자강론자들은 홍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보수통합론에 거들 선을 그었다. 최근 전대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 영감님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6월 지방선거서 투표

다음달부터 기초소위 구성 선거제 등 쟁점 집중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주요 일정을 보면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

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11월 초 일주일에 2차례씩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

무엇보다 11월 중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향후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문화 작업

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늦어도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실시된다.

특히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헌안이 순조롭게 마련될 것지는 미지수다. 우선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범위와 관련, 여야가 과연 합의를 이룰 것인지도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주승용 "LH, 3년간 영구·국민임대 부지 10만호 줄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하면서, 지난 3년간 영구·국민임대 아파트 10만2000호를 지을 부지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가운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22만 6000호였다.

LH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만4188호로 총 5만50호를 착공한 것을 감안하면 17만 6000여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정상인데, 현재 남은 임대 부지는 7만 4000호 규모에 불과하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북구 운양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동림지역 도시지역 토지 276평 감정가 83,000,000 최저가 58,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차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중일부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부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원면 수당리 입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입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